광남일보

조간 제8021호 대표전화 062-370-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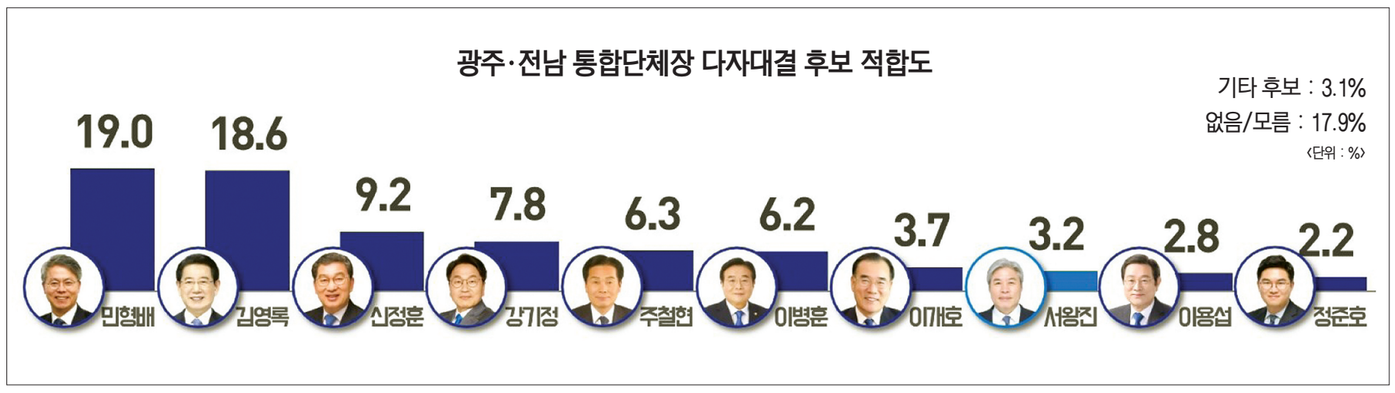
GwangNam.co.kr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음력 12월 18일)

민형배 19.0%·김영록 18.6% '초접전'

광남일보·KBC광주방송 공동
광주전남통합단체장 후보 여론조사

▶관련기사 2·3면



신정훈 9.2%·강기정 7.8%·주철현 6.3%·이병훈 6.2%
광주 민형배·전남 김영록 '우세'…지역별 지지구도 뚜렷
'부동층 21%' 향후 후보 간 연대 여부에 판세 요동칠듯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이 통합단체장(전남광주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상황을 가정한 조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오차범위 내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남일보와 KBC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광주·전남 만 18세 이상 시·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다자대결'에서 민형배 의원이 19.0%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6%로 뒤를 이었으며, 두 후보 간 격차는 0.4%p에 불과해 오차범위(±3.1%p) 내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그 뒤를 신정훈 의원(9.2%), 강기정 광주시장(7.8%), 주철현 의원(6.3%),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6.2%) 순으로 이었다. 이밖에 이개호 의원(3.7%), 서왕진 원내대표(3.2%), 이용섭 전 광주시장(2.8%), 정준호 의원(2.2%) 등이 뒤를 따랐다.

주목할 점은 전체 응답자의 21.0%가 지지 후보를 유보했다는 점이다. 기타 응답이 3.1%, 무응답이 17.9%로, 향후 부동층 이동과 후보자간 연대에 따라 판세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역별로는 후보간 지지 구도가 뚜렷하게 갈렸다.

광주에서는 민형배 의원이 30.2%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고, 김영록 전남도지사(12.1%), 강기정 광주시장(10.3%)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3.6%로 선두를 차지했으며, 신정훈 의원(12.8%), 민형배 의원(10.4%)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통합단체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민형배 의원(18.5%)과 김영록 전남도지사(16.8%)가 1.7%p 차이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이어 신정훈 의원(9.4%), 주철현 의원(7.6%), 강기정 광주시장(7.0%), 이병훈 위원장(6.3%), 이용섭 전 시장(6.1%), 이개호 의원(5.4%), 정준호 의원(3.8%) 등 순이었다.

통합단체장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기준으로는 '지역경제·일자리 등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행정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실행력'(20.7%), '광주·전남 균형발전과 지역 갈등 조정 능력'(18.7%), '정책·공약의 현실성과 전문성'(14.9%), '도덕성·청렴성 등 인물 신뢰도'(11.7%) 순이었다.

광주의 경우 민생 문제 해결 능력(33.5%), 행정통합 추진 역량과 실행력(20.6%), 정책·공약의 현실성과 전문성(20.0%)을, 전남은 민생 문제 해결 능력(30.9%), 지역 갈등 조정 능력(20.9%), 행정통합 추진 역량과 실행력(20.7%)을 각각 중요하게 판단했다. 광주·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각각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4%가 찬성, 27.0%가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이 반대보다 31.4%p 높았다. 찬성 비율은 전남(59.1%)이 광주(57.6%)보다 1.5%p 높았고, 반대는 광주(30.0%)가 전남(24.6%)보다 5.4%p 높게 나타났다.

행정통합 찬성측의 찬성 이유로는 '산업·일자리·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가 35.9%로 가장 많았다.

'재정·예산 확보 및 국비 지원 등 재원 측면의 이점'(20.0%), '광역 단위 행정·정책 통합에 따른 효율성'(16.3%), '광역 경쟁력과 대외적 위상 향상'(15.5%), '행정서비스의 표준화·연계 등 주민 편익이 높아질 수 있어서'(10.2%)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통합 반대측의 반대 이유로는 '행정통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할 수 있어서'가 27.9%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도 '특정 지역으로의 기능·예산 쏠림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27.7%),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 미미 우려'(21.1%), '지역의 정체성·자치권이 약화 우려'(15.9%), '행정체계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질이 낮아질 수 있어서'(5.9%)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70.2%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으며,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7.7%로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진보당은 3.3%, 개혁신당은 2.2%였고 타 정당 선택은 1.4%, 무당층은 7.4%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를 활용한 100%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광남일보와 KBC 광주방송,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전남 시도의회, 행정통합 동의안 동시 의결

의원 정수·정체성 등 우려에도 압도적 찬성 통과
국회 입법절차만 남아…이달 중 본회의 상정 예상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공식 찬성하면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됐다.

광주시의회는 4일 제3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3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제외한 22명이 전원 찬성으로 통합안을 가결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60명 중 53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행정통합을 찬성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폐지할 때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해, 시·도는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 절차에 나섰다.

의회 동의안이 의결되면서 통합 절차는 2월 중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출범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시·도의회 의원들은 통합을 찬성하면서도 지방소멸과 청년 인구 유출, 재정난 등 다양한 우려 사항을 제시했다.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용임 시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시민투표 없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광주의 정체성과 시민 주권을 훼손하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에는 불참했다.

또 통합 이후 시민 불편 우려, 교육 통합에 대한 불안 해소 필요, 기획조정실 위치 명확화,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 보완, 주청사의 광주 설치를 특별법에 명시,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 등도 제기됐다.

전남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 진보당 소속 박형대 의원 1명만 발언한 뒤 표결에 부쳐 압도적인 찬성으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공백사태 해소될까

내일 이사회…후보 3인 추천 1년 4개월 만 안건 상정 예정

한국에너지공대(KENTECH·켄텍)의 총장 공백 장기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총장 선임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직무대행 체제 해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4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켄텍 이사회는 6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총장 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대학 총장추천위원회는 공모 절차를 거쳐 2024년 11월 후보 3인을 이사회에 추천했으나 이후 1년 4개월 동안 해당 안건은 이사회에 오르지 못했다.

당시 추천된 후보는 현 박진호 총장 직무대행과 포스텍 총장 출신 김모 씨, 충남대 총장을 지내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역임한 정모씨로 알려졌다.

켄텍은 2022년 개교 이후 국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이끌 전략 대학으로 성장해 왔으며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주액에서 국내 3위를 기록하는 등 연구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다만 2023년 12월 초대 총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간 이어진 만큼 이번 이사회가 대학 운영 정상화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